

골목으로 '풍선 효과'...청사 주변 '주차 대란'

공영주차장 5부제·공공 2부제 첫날

인근 도로 불법 주차차 급증...단속·혼잡 동시 발생 대중교통 이용 늘었지만 혼선...불법주차차 늘어나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위해 공공부분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오일제)를 동시에 시행한 첫날인 8일, 광주지역 지자체 청사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청사 주차장은 한산했지만, 인근 골목과 이면도로에 차량이 물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청사 정문에는 '원유 안보위키 경계 발령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과 '짝수차량 운행일' 안내 현수막이 내걸렸다. 청원경찰들은 출근 시간대 몰려드는 차량의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하며 통제를 나섰다.

그러나 민원인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즉

각 구분하기 어려워 차량마다 방문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홀짝제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청사에 진입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한 직원은 "홀짝제 시행일을 깜박했다"며 "잠시라도 주차할 수 없는지 물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사 주변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3·8번인 5부제 대상 차량을 운행한 민원인들의 주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동명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앞 공영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역



광주 서구청사 앞에 불법주차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시 5부제 시행 안내가 이뤄졌지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 차량들이 주변 골목으로 분산되며 혼잡이 가중됐다.

운전자 김모씨(40)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5부제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며 "결국 단속을 감수하고라도 골목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구는 직원들의 출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1대였던 무료 통근버스를 2대로 늘렸고, 이날 70여명이 이용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시내버스타도 도로 이동하는 직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직원 전용 주차장에 대한 단속도 이어졌다. 청원경찰은 번호판을 확인하며 부제 위반 여부를 점검했고, '적용 제외 비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

차를 허용했다. 전반적으로 청사 내부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정문 차단기 주변에서도 불법 직원 3명이 나와 부제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불법 정거등록 차량은 차단기에 홀짝 2부제 위반 여부 등이 미리 입력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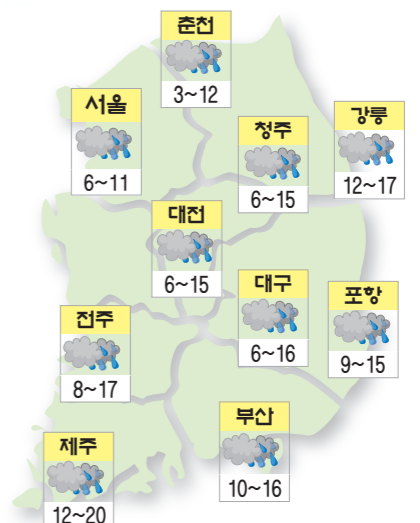
이날 끝자리 홀수인 등록차량이 입차할 때마다 차단기 전광판에 '부제 위반 차량'이라는 문구가 뜨며 차단기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위반 차량은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회차했다.

한편 단속은 청사 외부까지 확대됐다. 오전 10시에는 직원들이 공영주차장과 인근 도로를 돌며 차량 번호를 촬영해 공무원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된다.

글·사진=임영진·송태영 기자 looks@

오늘의 날씨

| | | | |
|----|-------|----|-------|
| 맑음 | 06:09 | 달림 | 01:03 |
| 맑음 | 19:00 | 달림 | 10:25 |



| | |
|-----|-------|
| 광주 | 8~18 |
| 목포 | 10~17 |
| 여수 | 8~17 |
| 순천 | 7~17 |
| 구례 | 7~17 |
| 광주 | 9~17 |
| 신도 | 10~18 |
| 흑산도 | 10~14 |
| 고흥 | 7~17 |
| 진도 | 11~17 |

| | | |
|----|-------|---------------|
| 목포 | 미물(고) | 06:20 / 18:08 |
| | 샘물(저) | 11:34 / 23:22 |
| 여수 | 미물(고) | 00:48 / 12:40 |
| | 샘물(저) | 07:05 / 18:48 |

12·29 제주항공 참사 유해 수색 13일 재개 60일간 진행...활주로·둔덕·외곽 등 집중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해 수색 작업이 재개된다.

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경찰, 군 등은 오는 13일부터 무안국제공항 주변에서 희생자 유해 재수색에 나선다.

사조위 등은 참사가 발생한 공항 활주로와 둔덕 주변, 공항 외곽 등을 수색할 예정이다.

수색은 주 5일씩 60일간 이뤄진다. 이번 수색은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사고진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 등이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앞서 유류 창고에 보관된 꼬리날개 등 사고진해물 대상으로 전해 재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해추정 물체 107점과 유류품 794류, 휴대전화 6점이 발견됐다. 이 중 유해는 38점, 비유해는 7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현재까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달 14~15일에는 공항 활주로 담장 외곽과 통제구역 철조망 안쪽에서 유족들이 직접 유해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공항 외곽과 둔덕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해를 직접 발견하면서 정부의 초기 부실 수습 책임론이 불거졌다. 참사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구속이나 공식 조사 결과 발표는 없는 상태.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아직도 수습 못한 유해가 남아 있다"며 "철저한 재수색과 함께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교통안전체험교육 받는 어린이들 8일 오전 광주 북구 오동동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은 유엔미 유치원생들이 광주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 강사로부터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판 이해 등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도민 배움 기회 확대

도, 155개 강좌 2064명 수강...전문 강사 수업 진행

전남도가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을 강화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배우도록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인 '2026년 전남형 평생학습'을 운영한다.

전남형 평생학습은 도민이 10명 이내의 팀을 만들어 원하는 장소와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시설이 떨어 참여

가 어려웠던 농어촌 지역 주민도 집이나 마을회관 등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전남도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한다. 강좌는 자격증 취득 후 취·창업에 돕는 직업교육, 건강·취미·인문학 등 생활교육, 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 도민의 재취업과 창업에 돕는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24개 강좌에 186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7명

이 취·창업에 성공하고 30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만족도도 95.44%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1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의를 거쳐 131강좌에 1750명을 지원을 확정하고, 3월 2차 신청을 받아 총 155개 강좌에 2064명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강석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교육 기회 부족한 지역까지 배움을 전달하는 사업이다"며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코레일, 5월 연휴기간 열차 운행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월 초 연휴 기간에 운행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노동절인 1일부터 어린이날 5일까지 5일간 호남·경부선 등 전국 6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해 공급 좌석을 약 3만3000석 늘린다.

이에 따라 호남선(목포-웅산)은 5월 4일과 5일에 추가 운행이 이뤄지며, 증편되는 열차는 KTX와 새마을호 등 각각 1

편씩이다.

추가 운행(상행·하행)으로 KTX는 3820석, 새마을호는 1700석이 추가 공급된다.

추가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www.korail.com),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공기안전체험관' 개소...“숨 쉬는 공기 체험”



체험객들이 최근 '공기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공기안전체험교육인 미니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다.

공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광주 도심에 문을 열었다.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공기질 관리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주목된다.

한국공기안전원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 광주 북구 신안동에 '공기안전체험관'을 마련했다. 체험관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기 위생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공기 위생 극대화'를 주제로 △체험존 △교육존 △검증존으로 구성됐다. 체험존에서는 양압·환기 실습과 해파

(HEPA) 필터 구조 설명 등을 통해 깨끗한 공기의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교육존과 검증존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와 함께 실시간 공기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익힐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기 정화 및 환기 체험, 실내 공기질 측정 시연, '공기가 안전한 집 만들기' 교육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만드는 기술과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등 대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전시 콘텐츠가 강화됐다.

체험관 내부에는 고성능 해파 필터를

미세먼지부터 환기·정화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 '한눈에' 무료 교육·전시 콘텐츠 강화·체험·전시·검증 통합공간

적용된 공기 처리기가 설치돼 있고, 공기 처리 시스템과 격리 챔버를 결합한 개인 맞춤형 '베드 클린룸(Bed CleanRoom)'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직접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반응이다. 위석찬씨(29)는 "체험을 통해 실내 공기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기안전체험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공휴일, 주말은 휴관한다. 이용료는 무료다. 앞으로 체험관은 공기안전대피소 설

계 교육과 공기안전평가사 자격 과정, 공기안전등급 평가 등 전문 프로그램과 공기안전캐뎬 확충을 통해 운영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민정 한국공기안전원 연구원은 "사람은 하루 약 2만회 호흡하는 만큼 공기의 질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기안전원은 지난 2016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설립 이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공휴일, 주말은 휴관한다. 이용료는 무료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사랑한 부모 계좌서 돈 빼들려

미세먼지
○·부모가 사랑한 다음 날 고인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의 빼들려 딸이 항소심에서 징역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이경호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광주 한 은행을 찾아가 부모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38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은행에 방문해 고인 행세를 하며 서명란에 날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을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에 나선 점 등 감형 사유로 밝혀. 임영진 기자

'남북여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50년 만에 무죄 선고

남북여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가 50년만에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김공규 재판장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75)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남북됐다가 귀환한 여부의 발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976년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족행위를 전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 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국가가 피고인의 호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사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이번 판결이 위로를 되고 명예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